

Environmental Engineer

2006.

환경기술인

1

표지인물과의 만남

"지속가능발전정책의 토대를 세우는
임무 수행할 터"

-청와대 영태영 환경비서관

2006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

기고문

-다이옥신 분석과정중 불확도 요인고찰<끝>
-탈질 처리 공정을 위하여

NGO포커스

환경연합, 국내 30대 주요기업의 2006년 사회책임
(SR) 핵심과제 선정, 발표

환경법 소식

환경관련 9개 법률안 국회 통과



(사)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Korea Environmental Engineers Federation

“지속가능발전정책의 토대를 세우는 임무 수행할 터”



▲ 대담장면: 염태영 청와대 환경비서관(좌)과 김병오 편집국장(우)

“환경과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면서 상생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임기동안 그 중심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예정입니다.”

염태영 청와대 환경비서관은 현실에 봉착된 환경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다. 그는 오랫동안 시민단체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난해 1월에 환경관련 현안들을 조정하는 청와대 환경비서관직에 부임했다. 다음은 염 비서관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염태영 비서관님은 청와대내 환경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저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획운영실장을 겸하고 계신데, 상호 업무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의 공식적인 직함은 지속가능발전부문을 담당하는 국정과제비서관입니다. 대통령의 중장기 주요공약이나 정책들은 국정과제담당 비서관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국토, 물, 교통, 에너지, 환경부문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은 천성산 문제나 새만금간척사업, 골프장 문제 등 환경관련 현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현안과 관련된 정책갈등과 분쟁을 국민의 시각에서 정리하고 관련 내

용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 **참여정부 초기에는 환경비서관직이 없어 현정부가 환경문제를 등한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후 환경원로 및 시민환경단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부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와대내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의 신설은 환경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하여 환경원로 등 환경인들의 꾸준한 요청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환경정책은 청와대내 정책실장 밑에 사회정책 수석실에서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은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국가의 중장기적인 전략과제로 접근하여 점검하고 관리되어야 하기에 참여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의 신설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비서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환경분야 국정과제를 챙기고, 관련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환경단체와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국정과제 업무내용 전반을 조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기도 합니다.

● **염 비서관님이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담당비서관으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소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임기간중에 대통령께서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도 하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4년도 말 비서관 선임 소식은 저에게 큰 갈등이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 등 환경분야에 대한 갈등사안이 봇물처럼 터졌던 때라 정신없이 일해 왔습니다. 그렇게 일해 온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방향성과 정책 대안 제시 등 현재 상황에 맞게 활동해 왔는지 아직은 평가하기 이른 것 같습니다.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이 필요하다. 사진은 '빈그릇운동-음식 남기지 않기 서약 캠페인'에 참여하여 염태영비서관(오른쪽 네번째)이 음식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빈 접시를 들고 있다.

니다. 그나마 지속가능발전비서관 재임기간중에 대통령께서 직접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을 발표하신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전 선언의 주요내용으로는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조세제도 등을 통해 친환경적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겠다, 온실가스 감축 등 범지구적 환경보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등을 포함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생활환경을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선언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 그리고 사회통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참여정부의 정책전반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비단 정부의 몫만은 아닙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환경기술인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은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협력을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 역할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저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환경과 발전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확립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 처음 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우리 인류가 무한히 경제성장과 개발을 계속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8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미래 인류가 지구에서 살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전세계 약 200여개국 정상들이 모여 환경을 살리면서 경제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리우선언을 했습니다. 후손들을 고려하면서 발전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는 국제적 약속을 마련한 셈이죠! 리우회의 이후 10년만인 2002

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 빈곤 문제, 물문제, 기후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참여형 국정운영의 핵심조직으로 중장기 국가전략과제의 기획·관리를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정과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되었으며, 12개 국정과제위원회의 하나로 확대·개편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경제·사회·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정책방향의 설정 및 물·에너지, 국토의 이용과 보전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주요정책,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행계획, 국가 주요정책수립시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39개 국가 주요 중·장기계획의 검토), 그 밖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자문을 드리기도 하는 등 다양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발전은 무엇보다 사회전체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합니다. 일반시민, 지방자치단체, NGO 및 기업들과의 어느 정도의 연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관의 갈등으로 사회통합과 연대감의 상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일방적 통치보다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인 동시에 사회적 공론의 장이라는 점입니다.

우선 조직상으로 보면 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전국 각 지역별, 직능별로 추천받은 분들로 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5개 전문위원회는 시민단체 활동가와 기업의

대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NGO, 기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수행하는 사회적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정책 자문을 위한 의견 수렴도 이런 공론화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정책 자문 내용 결정은 국정과제로 정해져있기도 하지만 시민단체와 관련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통해 정해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면에서 공론화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참여가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지자체, 전문가, 일반시민, 정부기구가 참여하는 논의의 테이블을 확대시켜 공론화 기능을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두가지 모두 중요한 국가과제입니다. 경제가 환경을 살리고, 환경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위원회의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저희 위원회의 활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정과제위원회로서 구체적인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 동아시아 지역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이슈 개발과 국제연대를 모색하기 위한 협력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제2차 동아시아 NCSd(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에서 연태영 비서관이 연설을 하고 있다.



▲ 국정과제회의는 대통령의 직접 주재하에 참여정부의 중장기 국정방향과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지난 2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총 8회의 국정과제회의(또는 국정과제조정회의) 보고와 총 4회의 서면보고를 통해 대통령께 직접 정책지문을 드린바 있다.

앞으로 우리위원회에 주어진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여 정부정책이 경제와 환경,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균형 있게 수립되고 이행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경제와 환경의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더불어, 재이용, 재사용 등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자원순환형 산업 정착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고용문제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기술일 계획입니다. 환경희생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확대, 하천오염 감시인력 확충 등 생태계 보전 강화, 유기농산물 학교 급식 확대를 통한 유기농 활성화, 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강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이나 대응전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가 생산과 소비 전방면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및 자원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소비구조의 정착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후변화에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부문 특히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을 높이고, 획기적인 수요 관리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을 낮춘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2004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갈등관리 기능 등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동북아 중심국가 등 중요한 국정과제와 견줄만한 비중 있는 국정과제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되었다.



년 6월에, 2015년 1차에너지 수요의 10%를 감축하는 것과 2011년까지 전력의 7%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국가 목표를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각 부처에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장기 목표에 맞춰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해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해나간다면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도 큰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대형국책사업이 환경보전논리에 밀려 표류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와 정부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1960년대 이래 짧은 기간동안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룬 국가로 발전하였으나 다양한 이해·가치관 갈등으로 사회통합과 연대감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참여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 등으로 공공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표출과 갈등양상이 대폭 증가하면서 개발과 관련된 환경갈등의 경우 가치관적 갈등으로 전환되고 장기화·대규모화 하는 등 갈등의 관리능력 향상이 국가발전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구간 노선결정,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관련 갈등 등은 미래세대, 생명가치 등 생태적 관점과 연계되어 기존 사회적 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많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나아지고 있지만 과거 정책추진과정이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경우처럼 대규모 개발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놓고 첨예하게 논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조정과 타협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안으로 정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이해 당사자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동일한 예측 결과를 놓고 정부와 이해 당사자가 서로 협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규제는 완화시키되 환경규제만은 점차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비서관님의 견해는?**

▲ 지금까지 환경규제를 기업경쟁과 국가 경쟁력에 해악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었습니다. 환경규제의 강화가 기업의 환경비용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또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려 결국 기업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킨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80년대 이후를 기점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에 환경문제가 지구적인 생존권 차원에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90년대에는 환경문제가 경제, 통상, 정치 문제를 지배할 현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환경규제 움직임이나, 세계무역기구(WTO)나 경제협력기구(OECD)에서의 환경과 무역과의 연계 논의 등, 실지로 기업과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조치들이 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보호와 환경규제는 반대로 기업 경쟁력에 득이 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EU, 미국, 캐나다, 중국 등은 청정생산 및 자원 순환형 사회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자국의 기업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나라 밖까지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나 정부내에서 이러한 국제적 변화의 물결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경제문제가 현안으로 다가오자 환경문제는 다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 투자'라는 사실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환경규제 완화로 대학의 환경관련학과 졸업생과 기 배출된 환경기술인력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환경기술인력의 고용창출은 환경분야 대학교 졸업생의 배출 확대와 환경규제완화 등의 조치로 인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점은 공공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환경전문인력 채용확대이며, 둘째는 민간부분에서, 특히 교사활용확대 등을 통해 환경교육 수요를 우회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경기술인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관련 학과에서도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오염물질의 사전예방, 자원순환형 사회의 구축과 지속적 발전이란 명제가 환경공학의 핵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오염복원, 환경영향평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환경건설링, 환경경영, 청정기술, 환경감사, 환경인증, 생태관리,

환경생명공학, 환경정보, 청정생산, 건설환경관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환경분야에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환경설비의 현대화와 환경기술의 고도화로 산업현장의 환경기술인들에 대한 재교육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문 민간단체에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면 경쟁력을 촉발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비서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재교육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인력의 재교육은 필요한 것이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재교육은 반드시 법정교육화 하여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재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공부분에서 교육의 질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한편 다양한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대한환경공학회, 한국대기환경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폐기물학회 등 많은 환경관련 학회가 있으며 이들은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을 포함한 고급 전문가들의 집합체입니다. 관련학회와의 협약 또는 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전문기품을 활용한 환경전문인력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에서도 체계적인 인력양성 정책 수립 추진 및 환경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 대담후 기념촬영:좌로부터 이상호 연합회장, 염태영 청와대 환경비서관, 김병오 편집국장

환경기술개발 투자 확대 등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기술인력 육성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하여 수원시장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6년 '젊은 시장감'으로 주변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고, 권유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원지역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 때마다 정치권으로부터 강한 출마 권유를 받고도 고사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청와대의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서 이 일에 여념이 없고,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가 많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국토문제, 에너지문제, 교통문제 등 경제·사회·환경의 통합 정책을 마련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선의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국가의 주요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경험과 시민운동의 경험을 살려 수원을 살기 좋은 도시,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수원시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싶은 바람도 한편 갖고 있습니다. 청계천보다 10년 먼저 수원천 되살리기 운동을 펼쳐 전국 최초의 자연형 하천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으며, 수원지역의 화장실을 호텔수준으로 바꾸어 놓아 이를 전 세계인이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등 수원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수원을 선진도시들이 부러워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은 희망 또한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원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사랑을 받았으므로 기회가 된다면 수원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환경기술인으로 격려의 한말씀?

▲ 환경기술인들은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지에서 우리나라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해한 환경과 작업공간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환경규제가 완화되면서 환경기술인들의 고용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앞에는 벽차고 지난한 과제들이 첩첩 산으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지킴이로서 소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여기서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도 환경산업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환경기술인들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환경기술인들이 우리나라의 환경파수꾼으로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하였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말없이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이 있었기에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환경기술인의 양 어깨에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환경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냅시다. 저도 환경기술인들과 함께 지혜가 모여 우리나라의 환경보전의 큰 수레바퀴를 함께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 임태영비서관 프로필

1960	경기도 수원 출생
1979	수원 수성고 졸업
1984	서울대 농화학과 졸업
1993	환경기술사(수질관리) 자격취득
1988~1992	삼성그룹 삼성종합건설(주) 환경사업부 근무
1994~1998	두산그룹 두산엔지니어링(주) 비상임이사
1994~2005	수원환경운동센터 사무처장 및 공동대표
2000~2004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운영위원장 겸 사무처장
2000~2005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
2004~2005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물·국토·자연분과위원회 전문위원
200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여성분과 환경부문 상근자문위원
2005~(現)	대통령비서실 지속가능발전 비서관

